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체계 정비·현장대응 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여름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체계와 대응방안을 전면 정비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폭염 일수가 평년의 2.3배, 열대야는 3.1배에 달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준비부터 재난 발생 대응, 재난 이후 복구까지 도민 중심의 종합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는 기존의 자연재난 긴급구조대책을 점검하고, 풍수해 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TF'를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했다. 이를 통해 풍수해 비상단계별 대응체계와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고도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문대응을 추진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소방본

부 및 각 소방서는 기상특보 발령시부터 선제적인 상황관리를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풍수해 대응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출동력을 강화하여 동시다발적인 출동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최고·최대 수위의 정교하고 우세한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임무수행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재난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며, 자연재난 규모에 따라 소방관서 대응단계를 가동하고 도·시·군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풍수해 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북소방은 실제 출동 유형에 맞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각 소방서에 확보하고 있는 체인톱, 수중펌프, 구조보트 등 수방장비 1,200여 점을 일제 정비하여 소방차량에 적재하고, 출동이 잦고, 위험성이 높은 나무제거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진안교육원)와 협력해 체인톱 안전조작 및 실전 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적 대응도 병행한다.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95곳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구조 접근이 까다로운 84곳에 대해서는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해 '현장 접근성', '구조 장비 활용성', '환자 이송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훈련 시에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호우 시 대피요령과 행동요령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재난 발생 시 폭증하는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본부는 예비 회선 63대를 추가 확보해 총 78대 규모의 비상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황 단계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하고, ARS 대기·콜백 시스템·문자 신고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해 신고 접수를 분산하고 실시간 상황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폭염 예방 및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소방본부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71세 이상 고령자와 야외 근로자 등 폭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예방·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구급대와 펌블런스 의용소방대가 무더위쉼터 안내, 폭염

예방 요령 홍보, 현장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119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 발생 시각과 장소를 분석해 '폭염안전지킴이'의 순찰 경로와 장비 배치 전략도 수립하고 있으며, 군 지역과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폭염 대책은 올해 1월 신설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운영질환자 발생 시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응급의료지도와 응급처치 안내를 제공하며, 무더위쉼터 위치 안내와 예방 교육까지 함께 수행하는 등 폭염 초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권역별 열사병 수용병원 정보를 매일 최신화하고, 병상 수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구급대에 즉시 전달함으로써 중증 운영질환자가 발생 시 이송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올해 여름은 기상이변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풍수해와 폭염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협업 상황에 강한 소방,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행정으로 어떤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지방보조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과 '전북특별자치도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보조사업 투명성·효율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지방보조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과 '전북특별자치도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가 검증된 외부 전문가 후보군(pool)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앞서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정산 검증 의무와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검증된 전문 감사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4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모집하고, 검증 실적 등 정량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통

해 도내에 소재한 회계법인 6사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제도를 최적화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고질 악취에 정책 중심 종합대책 가동 | 전북자치도,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구성

전북자치도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선 시군과 상설협의체 및 전문가와 함께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는 전주·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환경공단·전주기상청·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 분석, 행정 조치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 민원 대응 중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실행적인 해결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협의체는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일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 등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수질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 및 영향 실태조사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김제 읍지면 일대의 악취 배출원 실태조사도 이 과제 중 하나로, 총 130개소에 대해 측정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용역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축사육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 등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발대식이 28일 김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열린 가운데,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영석 익산 부시장, 김희욱 김제 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 13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 대기질 분석, 정밀현황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맞춤형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김제시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농가에 대한 돈·우사 매입을 마쳤으며, 남은 27개 농가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는 이미 완주 고산면, 익산 1·2산단, 진안 마령면 등 5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30일 완주 비봉면 2개 지역(9.3만㎡)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 의무 등이 적용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왕궁

면 일원에 대한 축사 매입(2023년까지 232개 농가, 67만㎡)을 마치고 매입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 바이오순환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악취원 제거를 통해 악취 관련 주민 민원이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60%가량 줄었다. /이만호 기자

탄소산업 완성형 생태계 구축 시동

도, 탄소산업발전위 개최

전북이 '탄소산업 완성형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테크비전센터에서 전북형 탄소산업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2025년 제1차 전북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산·학·연 탄소산업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및 '제3차(2026~2030)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착수보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제3차 탄소산업 종합계획은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탄소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부 정책 및 전북 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 수립 △실효성 있는 세부전략 및 과제 도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위원들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전북자치도가 그간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약속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2건의 정책과제를 발굴, 그 중 27건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환경 분석, 수요진단을 포함한 용역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 후, 하반기 중에는 제3차 종합계획(2026~2030)을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주 탄소 국가산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우리 도의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라며,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반영해 국가예산 확보, 제도 개선까지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2025 소리축제 안전대책 집중 점검

도, 종합계획 설명회... 주요 프로그램 추진 상황도 살펴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전북도청에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고, 여름철 개최에 따른 안전대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름에 열리며,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축제 시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폭염·폭우 등 기후 위험 요소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방안과 더불어,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전략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재하고, 축제 주관기관과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비롯해 관객 편의 증진 방안, 지역 참여 확대 전략 등이 논의됐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심청'이 무대에 오른다.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이번 개막작은 세계적인 연주가 요나 김파의 협업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깬 도전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제는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도는 시군 순회형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등 지역 설화를 활용한 공연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인당 수 설화의 배경지로 알려진 위도 수성당에서 열리는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름철 기후 변수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전 홍보 강화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과 관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개발공사,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북개발공사는 도내 산하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직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제3차(한국경영인인증)가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인권경영 선포식 이후, 공사는 인권경영위원회, 전북 혁신도시 인권경영협의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경영활동을 진행해왔다.

공사는 2021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고, 올해도 성숙도 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8일 재인증을 획득했다. /오상근 기자

"김 육상 양식의 시대, 전북이 주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김 산업 구조 전환·산업화 전략 제시

'김'은 '바다의 금'으로 불린다.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한 해 수출 물량이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김 생산량은 급감 추세다. 이 때문에 바다가 아닌 땅에서 김을 키우는 육상양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확보해 정부의 김 육상양식 공모사업 주관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가 변혁의 중심에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김 육상양식의 시대, 바다의 한계를 넘는다!'를 통해 "해양수산부 김 육상양식 R&D 공모사업 주관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전통적인 김 산업을 미래형 첨단 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척자가 돼야 할 시점"이라며

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김 산업 구조 전환과 산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육상양식은 기존 바다양식이 지닌 환경 제약과 계절성 문제를 극복하고, 연중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며 친환경성과 고부가가치를 겸비한 미래형 수산업 모델로 평가됐다. 연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김 수출시장에서 표준화된 육상 생산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K-김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김 육상양식 주관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도 산하 수산기술연구소가 육상양식에 적합한 김 종자 생산부터 유염, 물길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 기술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은 이같은 독보적인 양식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창업캠퍼스 운영, 민간 투자 유치 등 김 산업 전반의 육상양식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바다양식 어업인과의 공존 전략, 청년 및 귀어인 육성, 스마트 기지재, 기능성 식품산업 등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호 책임연구원은 "김 육상양식은 산업 구조 전환과 수산업 혁신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전략 분야라며 'K-김 육상양식 표준모델을 조기에 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전북자치도는 김 육상양식 시대를 이끄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